

충남리포트 제199호

ChungNam Report

2015. 12. 20.

CONTENTS

< 요약 >

1. 한중FTA 추진경과 및 협상내용
2. 충남의 농림어업 영향
3. 충남의 대응방안
4. 권역별 추진방향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강마야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maya@cni.re.kr

*공동연구진 : 김양중 · 박정철 · 김종화 책임연구원, 여민수 · 김정하 연구원

본 글은 2015년 12월 20일 한중FTA 발효를 기점으로 충남의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충남의 농업정책 대응방안, 세부 추진전략, 권역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요 약

- 한중FTA는 그간 2012년 5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4년간 협상 추진 경과를 거쳐 2015년 12월 20일 발효에 이룸
 - 농림어업 분야의 협상내용으로서는 농림업의 초민감품목은 581개(전체 품목수의 36.0%), 어업의 초민감품목은 87개(13.8%)로 높지않은 수준의 개방, 직접피해 최소화
- 충남의 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총 3가지 분석방법에 의하여 직간접 피해액(생산액 감소)을 추정, 직접 피해예상품목 도출함
 - 한중 FTA로 인한 충남의 연평균 피해액은 38.7억 원, 관세효과 없이도 기존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하여 897.6억 원,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580.6억 원으로 추정함
 - 직간접 피해예상품목은 농산물 13개, 수산물 12개, 임산물 4개 이상 등
-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기본구상 도출을 사전 전제조건으로서 정책축의 이동, 정책방식의 이동, 정책대상의 이동, 정책영역의 이동, 연계고리의 이동, 정책관점의 이동
 -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대 목표를 “농촌 생활소득의 보장,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로 하여 10대 전략에 따른 10대 핵심사업을 도출
- 권역별 기본구상은 △북부권-소비자와의 교류 권역, △서해안권-농어업의 융복합, 중국과의 융복합 권역, △내륙강금권-지역성을 지속적 으로 확보하는 권역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도출함
 - 북부권인 천안·아산·당진은 환경과 소비 측면을 강조
 - 서해안권인 보령·서산·서천·태안은 상생과 교류 측면을 강조
 - 내륙강금권인 공주·논산·계룡·부여·금산·홍성·예산·청양은 지역 과의 연대를 강조

한중FTA 추진경과와 협상내용 ◀

01

- 2015년 12월 20일 한중FTA 발효를 기점으로 지난 4년간의 협상 추진경과를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함(〈표 1〉 참고)
 - 2012년 5월 2일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1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여서 2014년 11월 실질 타결, 2015년 6월 정식서명,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12월 20일 공식 발효

〈표 1〉 한중FTA 협상 추진경과

일자	내용
2012년 5월 2일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
2012년 5월~2014년 11월	14차례 협상 개최
2014년 11월 10일	한중FTA 협상타결 선언
2015년 0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
2015년 06월 01일	한중FTA 정식서명 및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5년 06월	영향평가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발표
2015년 0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5년 11월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2월 20일	한중FTA 발효

- 한중FTA 농림업 분야의 협상내용을 요약해보면,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타결, 개방에 따른 직접피해 최소화함(〈표 2〉 참고)
 - 전체 농림축산물 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3%), 일반품목 589개 (36.0%)로 합의, 이 중 216개 품목은 즉시 철폐, 나머지 양허제외 548개 품목을 제외한 847개 품목은 점진적 개방 결정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농림축산물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 64%, 수입액 기준 42%로 타결, 주로 사료용·종자용·가공원료로서 중장기 위기 품목

- 초민감품목 중 쌀, 축산물, 과일류, 채소특작류 등 대부분의 신선농림축산물들은 양허제외, 기존 수입의존도가 높은 김치·혼합조미료·기타소스·팥·들깨·고사리 등은 부분감축, 참깨·팥·대두·맥아·고구마전분 등은 TRQ에 포함

● 한중 FTA 수산업 분야의 협상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어서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피해를 최소화, 중국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를 100%를 유도해 우리 수산물 수출확대 가능성도 커진 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수입물량 증가 예상됨(〈표 2〉 참고)

-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고등어·꽃게·전복·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이자 중국의 주요 불법어획물, 농어·돔·민어·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 대게·소라·전갱이·홍어 등 자원관리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이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

〈표 2〉 한중FTA 농림어업 분야의 주요 협상내용(초민감품목의 경우)

분야	양허 유형	품목수 (개)	비중(%)	주요 품목
농림업	TRQ	7	0.4	참깨(24,000t), 팥(건조/기타, 3,000t), 대두(콩나물콩/기타, 10,000t), 맥아(5,000t), 고구마전분(5,000t) 등
	부분감축	26	1.6	김치(조제저장), 혼합조미료, 기타소스(다대기), 팥(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송이버섯(냉동) 등
	양허제외	548	34.0	쌀, 보리, 감자, 신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감귤류, 사과·배·포도, 마늘, 양파, 호박, 고추, 인삼류 등
	소계	581	36	
	총계	1,611	100.0	
어업	TRQ	14	2.2	바지락(활, 냉장, 냉동), 낙지(활, 냉장, 냉동), 아귀(냉장, 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수입불가피 품목
	부분감축	9	1.4	굴, 김, 꽃게(냉동), 복어(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고관세 위주
	양허제외	64	10.2	꽃게(활, 냉장),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활, 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 중국의 주요 불법조업 품목, 주요 생산 및 관리자원 어종
	소계	87	13.8	
	총계	629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주: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 부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 (출처 : 무역협회 무역용어)

1. 직·간접 피해액

1) 직접 피해액

- ① 분석방법 :한중FTA로 인한 국가가 제시한 농림어업 연평균 피해액 181억 원을 근거로 충남의 비중을 감안하여 연평균 약 38.7억 원의 피해액 예상됨(〈표 3〉 참고)
 - 농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48억 원, 충남은 8.8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 임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29억 원, 충남은 5.5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 어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104억 원, 충남은 24.4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표 3〉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 직접 피해액(생산액 감소)

구분	품목부류	국가의 연평균 피해액	충남의 비중	충남의 연차별 피해액(억 원)					20년 누계 (억 원)
		(억 원)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농업	전체(재배업+축산업)	-48	-	-8.8	-4.7	-7.4	-9.7	-13.0	-175.0
	재배업	-46	-	-8.4	-4.1	-7.0	-9.3	-12.8	-167.4
	곡물류	-6	17.0%	-1.0	-0.5	-0.9	-1.2	-1.5	-20.4
	채소류	-21	16.0%	-3.4	-1.9	-2.7	-3.7	-5.3	-68.8
	과실류	-4	22.0%	-0.9	-0.2	-0.7	-0.9	-1.3	-15.6
	특양용, 기타	-15	21.0%	-3.2	-1.5	-2.7	-3.6	-4.6	-62.6
	축산업	-2	19.0%	-0.4	-0.6	-0.4	-0.4	-0.2	-7.6
임업	전체(임업)	-29	-	-5.5	-5.3	-4.4	-7.7	-4.7	-110.5
	목재	-15	19.0%	-2.9	-0.9	-2.8	-6.1	-1.9	-58.4
	단기소득임산물	-14	19.0%	-2.6	-4.4	-1.6	-1.6	-2.8	-52.1
어업	전체(어업)	-104	-	-24.4	-6.8	-18.0	-30.3	-43.5	-491.5
	어류	-48	6.5%	-3.1	-0.8	-2.2	-3.9	-5.8	-62.9
	갑각류	-52	26.3%	-13.7	-3.9	-10.5	-16.8	-23.4	-274.0
	패류	-36	31.1%	-11.2	-3.1	-8.1	-14.0	-20.2	-225.8
	연체류	19	7.0%	1.3	0.4	1.0	1.7	2.3	26.6
	해조류	19	12.0%	2.3	0.7	1.8	2.8	3.6	44.6

자료 : 농림업은 통계청(2010)의 농림업총조사, 어업은 해양수산부(2013)의 수산정보포털 어업생산통계

- 주 : 1. 충남의 비중은 농림어업별 다른 비중 수치를 사용했는데 농림업은 품목부류별 전국 대비 면적 비중(해당품목군별 최대치), 어업은 품목부류별 전국 대비 생산액 비중
 2. 국가에서 품목별 세부 피해액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품목부류에서 피해품목 위주의 최대치 비중을 사용하여 추정

2) 간접 피해액

- ② 분석방법 : 한중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전국의 연평균 피해액은 농업부문에서만 5,191억 원, 충남은 897.6억 원으로 예상함
 - 관세효과 없이 매년 1.34억 달러씩 증가하여 농업 부문은 5,191억 원 생산액 감소, 충남 재배 면적 비중이 13.6% 달하여 충남 농업은 897.6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표 4〉 참고)
- ③ 분석방법 :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한계가구로 보고 붕괴 시 연평균 피해액은 58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충남의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농가는 전체의 27.5%, 어가는 12.5% 비중 차지하여 이들의 판매금액 누적액을 합산하여 보면 연평균 피해액은 약 58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표 4〉 참고)
 - 단, 한계가구 붕괴는 자연적 감소로 인한 원인이 주를 이루지만 한중FTA로 인해 붕괴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 결과

〈표 4〉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 직간접 피해액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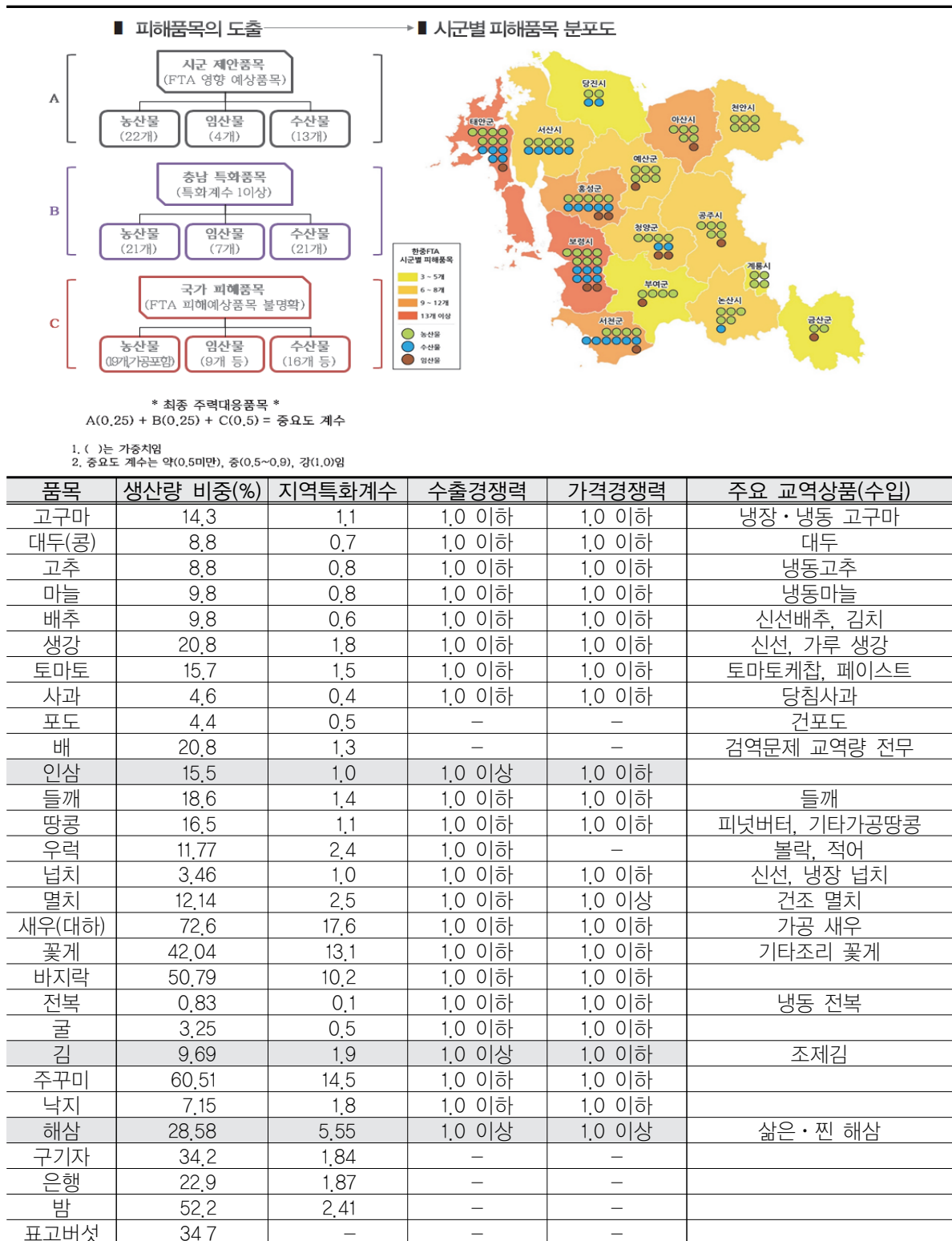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지역	농업	임업	어업	계
직접피해액	① 한중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전국	-48.0	-29.1	-104.0	-181.1
		충남	-8.8	-5.5	-24.4	-38.7
간접피해액	②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전국	-5,191	미산정	미산정	-5,191.0
		충남	-897.6	미산정	미산정	-897.6
	③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연평균 피해액	전국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0.0
		충남	-561.5	미산정	-19.1	-580.6
소계		충남	-1,467.9	-5.5	-43.5	-1,516.9
※ 참고 : 직접피해액	① 한중 FTA로 인한 20년 누적 피해액	전국	-958.0	-582.0	-2,079.0	-3,619.0
		충남	-175.0	-110.5	-491.5	-777.0

- 3가지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한중FTA로 인한 충남 농림어업의 직접피해액은 연평균 38.7억 원, 간접피해액은 연평균 1,478.2억 원으로 추정(〈표 4〉 참고)

2. 직·간접 피해예상 품목

〈표 5〉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직간접 피해품목 도출과정과 현황



주 : 국가에서 피해품목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피해품목이라고 할 수 없고 한중FTA에 따른 포괄적·간접적인 품목을 분류하여 중요도 계수에 의거하여 최종 도출하였고 음영처리된 품목은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말함.

1. 핵심이슈 및 키워드

- 한중FTA 체결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누적적인 피해 축적
 - 수 차례 수입개방으로 인해 현장의 민감성 반응 정도 미약
 - 직접적 피해액 영향분석 연구결과와 현실에서의 체감규모 간 간극
 - 한중FTA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대중국 교역량 증가로 인한 피해 축적
- 한중FTA에 따른 심리적 위협인식 및 경영불안정성 심화
 - 타 FTA보다도 한중FTA에 대한 심리적 위협인식 높은 편
 - 한중FTA로 인한 농어가 심리적 경영불안정성 심화와 경영포기 의지 강화
- 기존 FTA 대책내용에 관한 실효성 의문 제기, 정책신뢰도 저하
 - 경쟁력제고 대책 및 구조조정 중심의 대책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양분화
 - FTA대책은 경쟁력 제고 중심,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은 보완적 대책 성격
- 각종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지표 악화
 - 소규모 경지면적 농가와 대규모 경지면적 농가 양분화
 - 농축산물 판매금액, 농업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관련 지표의 악화
- 농어가의 존립, 유지기반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 도농 간 양극화, 농어가 간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사회안전망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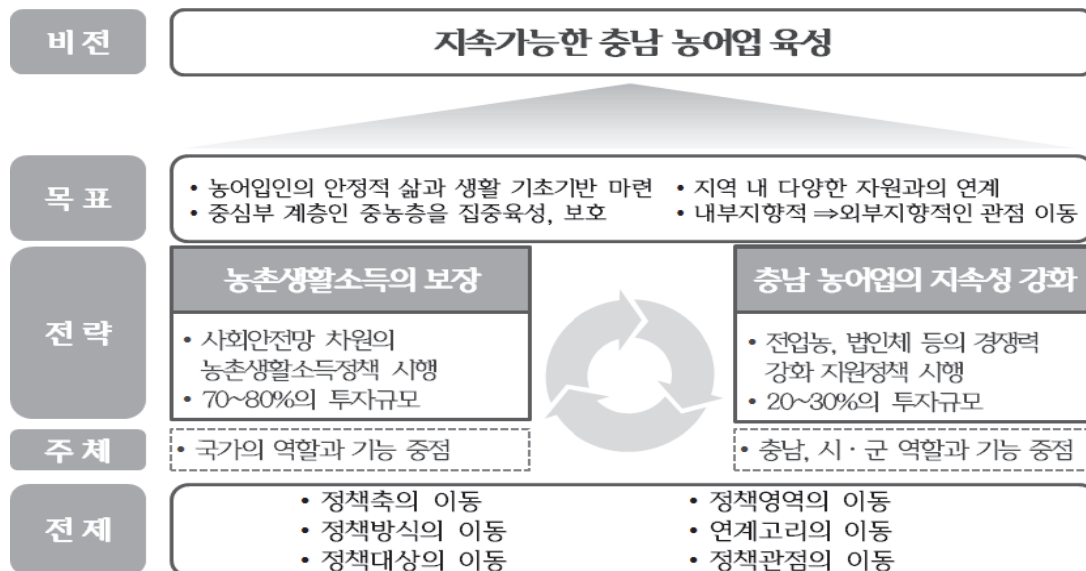
- 농어업 생산활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생활안전망 : 다수의 중소농 존립과 유지를 위한 최저생활안전망 구축
- ☞ 지속성 강화 : 지역 농어업 근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 강화
- ☞ 역량 집중 : 기존 대책의 신뢰성과 실효성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집중

2. 기본구상

●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기본구상 골격은 <그림 1>과 같이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실행주체로 구성함

- 전제조건은 지역중심 정책으로서 정책 축의 이동, 정책집행방식의 변화, 중소농 강조한 정책 대상의 이동, 다양한 정책영역의 확대, 주체와 자원 간 연계·순환(연계고리 이동), 농어업의 외부지향화라는 정책관점의 이동
- 비전으로서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 목표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 삶과 생활 기초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생활소득의 보장,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로 설정
- 전략으로는 농촌생활소득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의 농촌생활소득 정책 시행,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전업농 및 법인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정책 시행

<그림 1>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어업 대응방안 기본구상



3. 대응방안

● 2대 목표, 10대 전략, 10대 핵심사업을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실행할 것을 제안함

- 첫째, 농촌생활소득의 보장을 위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농어민 권익보호 및 증진,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8대 제안과제 도출(<그림 2> 참고)
- 둘째,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농림업의 외연확장과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 연안 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식문화 전파,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지역브랜드 강화,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전략(<그림 3> 참고)

1) 농촌생활소득의 보장을 위한 전략과 핵심사업(중앙정부 역할 중심)

● 전략1 :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 식량자급 직불 프로그램,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 농촌경관 직불 프로그램
- 이 중 우선 핵심사업으로서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을 선정, 제안코자 함

※ 참고 : 장기적으로 농어가의 최소한 생계가능한 수준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 혹은 농민배당” 제도를 도입 및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략2 :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 각종 지역자원(지역 관광·문화·역사·농특산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 창출, 다기능농업 육성과 다양한 소득원 발굴, 충남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 핵심사업으로서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 창출 시행을 제안

● 전략3 : 농어민 권익보호 및 증진

-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강화 및 농지보호를 위한 농민의 권한 강화 필요
- 핵심사업으로서 우리 농어민 가치 홍보 강화 시행을 제안

● 전략4 :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중FTA가 더 이상 농어업계 내부의 위기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문제이기에 국내산·수입산 식품 선택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주안점을 둠
-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원산지표기법 및 식품위생법 등 개정), 지역과 대형유통업체 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제화,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농자재 R&D 투자, 지역 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지역산 원료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불법유통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2021년)에 따른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 TPP 등 동시다발적 수입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 건의, 지역성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 수출하는 컨트롤 타워기능의 재설정과 수출사업 전면 전환 등을 제안

〈그림 2〉 농촌생활 소득의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



2)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핵심사업(충청남도 및 시군 역할 중심)

● 전략5 :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 농업 부문의 핵심사업은 건강한 토양-물-종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건강한 토양을 위한 윤·혼작 및 삼포식농법 보급, 벼짚환원농법, 건강한 물을 위한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지하수개선, 가축폐수 정화조 설치, 건강한 토종종자를 위한 토종종자 수집 및 지역종자도서관 설립 등 제안
- 임업 부문의 핵심사업은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가공, 자재공급과 결합한 융복합단지 조성,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다양한 형태의 임산물 가공과 상품개발,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추가확대 통한 자원보호

● 전략6 :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 어촌의 지속성 확보

- 핵심사업으로서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마을어업·양식어업을 활용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귀어·귀촌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를 통한 「어촌감성」 증진,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제안

● 전략7 :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 핵심사업은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으로서 대중국 수출농가 조직 구성 및 육성, 대중국 수출기획단 조직 및 운영,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문 브랜드 개발 등 제안

● 전략8 :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 핵심사업으로서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위한 기반구축을 제안
- 세부내용은 충남 농촌체험관광의 매력과 우수성 홍보, 안내판 등 전반적으로 중국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간판 정비, 충남도 고품질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가칭) ‘충남도 친환경농산물 대중국 수출 특화 지구’ 조성, 충남도 우수 농수산물 대중국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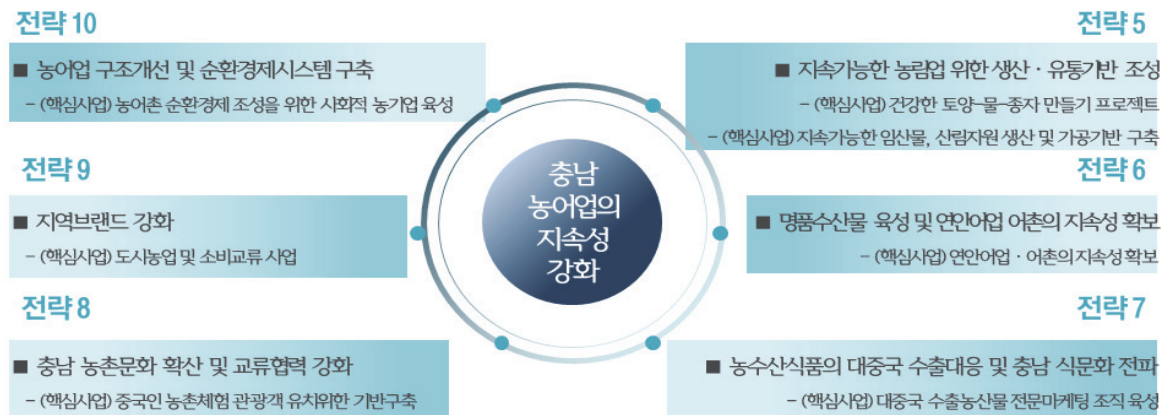
● 전략9 : 지역브랜드 강화

- 핵심사업으로서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추진·전개, 학교·회사 논·밭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농업 실현,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로컬푸드·농촌관광” 추진 등 제안

● 전략10 :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 핵심사업으로서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을 제안
- 세부내용은 농어촌 지역의 지역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환경제 조성,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 농기업 육성, 농어촌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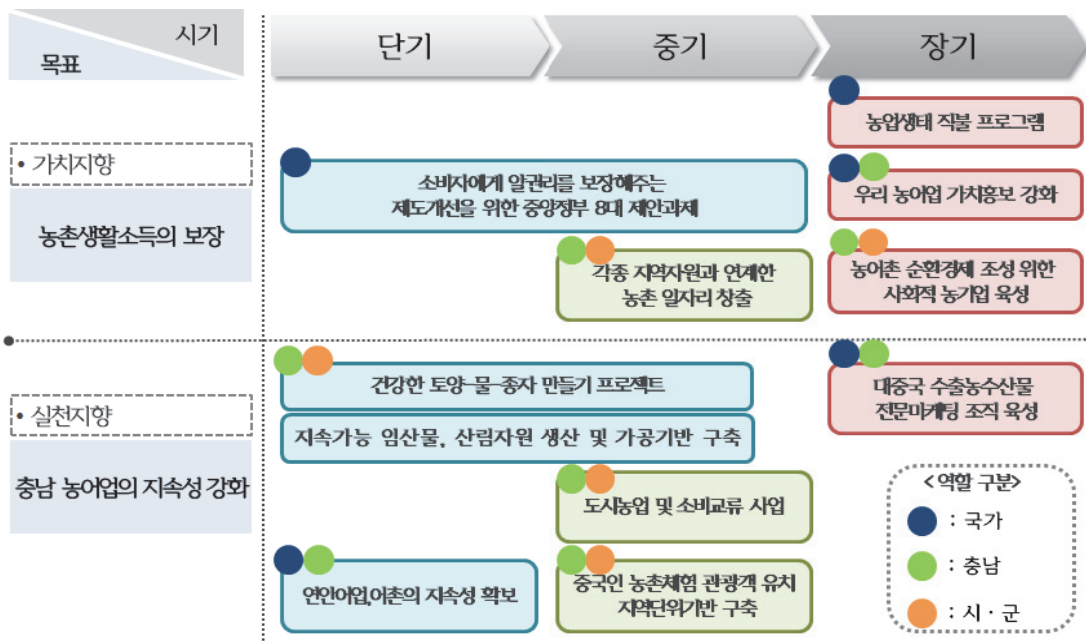
〈그림 3〉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4. 핵심사업의 로드맵

- ◎ 가치지향적인 “농촌생활소득의 보장”은 중장기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접근, 중앙정부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관련 제도개선 문제제기부터 시작하도록 함
- ◎ 실천지향적인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는 단중기에 집중적으로 시행, 충청남도과 15개 시군 역할을 균형적으로 분담하여 농어업계 외부와의 소통과 교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그림 4〉 참고)

〈그림 4〉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04

▶ 권역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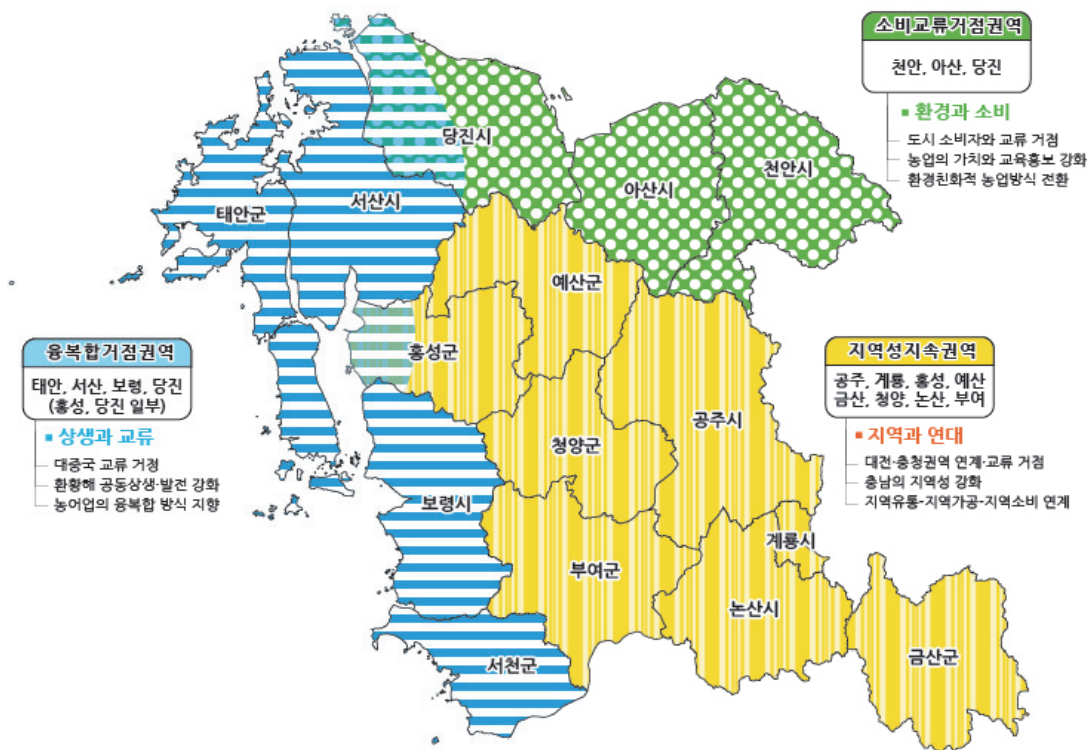
- 북부권인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는 소비자와의 교류 거점권역(소비혁신)으로서 “환경과 소비” 측면을 강조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함
 - 도시 소비자와 교류 거점, 농업의 가치와 교육홍보 강화, 환경친화적 농업방식의 전환 등으로서 3농혁신 중 소비혁신 관련 사업과 연계토록 함
 - 대표적으로 천안시는 친환경농축산물 홍타령 브랜드의 역사문화자원 연계 홍보 강화, 아산시는 지역식량 안정적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작부체계 조성, 당진시는 3농혁신 활력화 마을 육성 등

- 서해안권인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그 외 당진시와 홍성군 일부는 농업과 어업의 융복합, 중국과 충남의 융복합 거점권역(역량혁신)으로서 “상생과 교류” 측면을 강조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함
 - 대중국 교류 거점, 환황해 공동상생·발전 강화, 농어업의 융복합 방식 지향 등으로서 3농혁신 중 역량혁신 관련 사업과 연계토록 함
 - 지역별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보령시는 충남 농수산물 수출의 거점항으로서 “보령신항” 육성 및 충남 수산식품의 메카 육성, 서산시는 대산항 중국 초입전초기지로써 충남산 농식품 전용매장 설치 및 농어촌 복합 6차산업화 추진, 서천군은 원초김 주산지에서 김산업의 메카로 이미지 변신, 태안군은 건강한 양념채소류 종합육류 가공상품화 등

- 내륙금강권인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은 지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거점권역(지역혁신)으로서 “지역과 연대” 측면을 강조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함

- 인근 대전·세종 등 충청권역과 연계·교류 거점, 충남의 지역성을 강화, 지역유통·지역가공·지역소비 연계 등으로서 3농혁신 중 지역혁신 관련 사업과 연계토록 함
-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공주시는 강과 산이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생태벨트 구축, 논산시는 지역의 품목별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소득 연계, 계룡시는 도시농업 기반구축 및 푸드플랜 전략수립, 부여군은 백제문화권 관광단지와 연계한 농식품 및 가공식품 개발, 금산군은 명품 고려인삼 수출사업 내실 다지기, 홍성군은 유기농쌀과 유기농채소로 구성된 홍성밥상의 개발과 확산, 예산군은 학교 및 유치원 사과 간식공급 사업, 청양군은 고추·구기자·표고버섯 고품질화 위한 양질의 자재공급 기반 구축 등

〈그림 5〉 권역별 기본구상과 추진방향



* 본 글은 충청남도의 연구용역 결과물(현재 미발간)을 요약한 것으로서 현재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강 마 야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10, kmaya@cni.re.kr

◆ 참고자료 ◆

〈인용자료〉

충청남도(2015),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충남연구원 연구수행, 현재 미발간, 연구진은 강마야.김양중.박경철.김종화.여민수.김정하)

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
(* 한중국 FTA 영향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참고자료〉

김양중(2014),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충남리포트 제139호, 충남연구원

강마야(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0호, 충남연구원

김종화(2014),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1호, 충남연구원

박경철(2014),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충남리포트 제142호, 충남연구원

〈통계자료〉

통계청(2010), 농림업총조사

해양수산부(2013), 수산정보포털 어업생산통계(www.fips.go.kr)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아·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희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커,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2015-49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양중	2015.12.03
2015-50	충남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	김기흥	2015.12.10
2015-51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5.12.17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